올 광복절도 '南南 갈등'의 장으로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광복절을 맞아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파주시협의회가 '815 평화통일 예배'를 열고 있는 가운데 (왼쪽) 같은 시각 임진각 망배단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방북 중인 한상렬 목사와 북한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 실용적 접근… '공정사회' 새 화두로

■ 이대통령 8·15경축사 뭘 담았나

개헌·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과 함께 통일세 검토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치권에도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을 비롯한 정치 선진화를 주문했다.

이번 경축사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공식발표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도 내용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세 신설**=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통일이 이뤄졌을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대비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통일이 현실 문제로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준비해 놓자는 얘기다. 특히, 국민 전체에게 통일을 대비한 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남북통일을 정치인을 비롯한 몇몇 특정 그룹의 담론 영역에 두지 않고 전 국민의 공동 관심사로 이끌어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미가 크다.

◇**공정사회구현**=이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 드러난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는 '공정 사회 구현'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뒤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개인의 자율과 공정한 경쟁, 강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정 운영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없애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동반발전, 노사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연계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둘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를 더욱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하나의 가치로 상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선진화**=이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 또다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개헌을 포함,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 잦은 선거에 따른 국력소모와 정치적 분열상을 털어내고 행정체제에서도 100년 전 마련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 미래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의 경우, 좁게는 선거횟수의 재조정에서부터 넓게는 국민기본권 조항의 보완과 권력구조개편까지 논의의 진폭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선거제도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도 여야가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시의 적절" 野 "진정성 결여"

■ 경축사 정치권 반응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선진화, 통일시대 대비라는 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했다며 정치선진화와 친서민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도 정치권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치선진화 차원에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권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공허한 말뿐인 경축사였다"고 지적한 뒤 "독식과 오만의 인사, 인권유린의 공권력 운용 등의 정치 행태를 보여온 MB 정권이 국민화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가세 인상·방위세 부활 등 거론

통일세 방식 놓고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어떤 방식의 통일세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거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세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만큼 정부 안팎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보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낮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방위세를 부활해 통일세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 제도의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가했다.

유 교수는 당시 "남한의 조세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막대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과거에 폐지됐던 방위세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 명칭이 어색하다면 방위세를 통일세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로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1990년 통일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연합뉴스

北, 한상렬 목사 20일 귀환 연기

형식적 조치 후 비난공세 강화 포석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당초 15일 돌아올 예정이던 한상렬 목사의 귀환 일정을 닷새 연기했다.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유종하 한적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20일 오후 3시에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남조선 적십자사가 해당기관에 통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측은 한 목사의 귀환일정이 연기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주목된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에 북한은 8·15 광복절을 남한 내 통일운동 진영의 활동을 부추겨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소재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과거처럼 올해 8.15를 남한 내 갈등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몰고갈 의도가 있다면 한 목사의 귀환을 15일 강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북측의 한 목사 귀환 연기조치는 유엔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판문점을 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의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상렬 목사가 귀환하면 체포와 함께 우리 공안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북한이 내외의 여론을 의식해 형식상으로나마 취할 조치들을 취한 뒤에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공세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남북관계 대립기에는 여론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조치들만 취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 목사의 귀환을 늦춤으로써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한일병합 강제된 것"

日 호소카와 전 총리 아사히 신문 인터뷰

일본의 호소카와 모리히로(72) 전 총리가 한일병합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며 간 나오토 총리가 담화에서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하지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14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간 총리의 한일병합 100주년 담화에 대해 "큰 획을 그은 담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한다"면서 "(한일병합은) 힘을 배경으로 강제된 조약이었다"고 말했다.

일본 국왕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황이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방문했으면서도 한국만 방문하지않은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경비에 대한 걱정 등이 있겠지만 조속히 방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또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피선거권까지 주는 것은 위화감이 있겠지만 납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2차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에 온 한국인 자손에게는 선거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침략전쟁'이라고 발언했다가 파문을 빚은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 중국과 한국, 동남아시아에 큰 고통과 희생을 유발한만큼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침략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회고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봐도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오히려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면서 "진정한 내셔널리즘은 상대의 입장에서 사리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역사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서로 가능한한 감정을 억제하는 태도, 어른스러운 대응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유보하는 것 외에 현실적 해결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에 의해 조선 침략전쟁에 참여했던 구마모토(熊本)의 영주인 호소카와가(家)의 18대 당주다. 그는 정계에서 은퇴한뒤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찻사발(다완)에 심취해 2년에 한차례씩 경남 산청을 방문해 직접 찻사발을 굽고 있다.

/연합뉴스